與 ‘특검법 개정안’ 원안대로 … 원내대표 합의 없던일로

여권내 “내란 종식 최우선…협상 대상 아냐” 강경 목소리
국힘 필리버스터시 순차 처리…정부 조직법 차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합의를 번복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금융감독위 설치 협조를 조건으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가 수사 인력만 일부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도부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도 줄줄이 SNS를 통해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니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내란 수사와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 연장과 금감위법 처리는 등치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수사 기간을 일괄적으로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강성 당 지지자들은 여야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층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합의한 지도부에 대한 사퇴 주장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당내 비판 속에서 정청래 대표는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이런 방침을 전한 뒤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한 합의 내용을 ‘협의안’이라고 칭하며 “(당 의원들이) 안 받아주면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의힘과 ‘합의’로 발표한 전날 협상을 ‘1차 협의’라고 표현하면서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에 추가 협상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국민이힘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안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여당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순차 처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 설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 상임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현실론으로 그런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예상보다 지지층 반대가 컸고, 결국 지금으로서는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결론 못낸 ‘밀실 쪽지 투표 담합’ 징계

민주 광주시당, 22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 담합을 통한 해당행위 의혹을 받은 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다시 연기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1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열린 제8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 청원서를 심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시의원 10명을 불러 소명 절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징계 시점은 오는 22일로 다시 잡혔다.

윤리심판원은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징계는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당원 자격 정지나 제명 같은 중징계는 재적 과반 이상, 최소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절차를 벗어나 비공식 쪽지 투표를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힘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에 면죄부

윤리위,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 논란으로 징계 요구를 받았던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해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징계 근거가 불충분해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내리지 않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계파 갈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두 의원이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후보 교체 투표를 추진했다며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으나 윤리위 판단은 달랐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자의적 결정으로 볼 수 없고 사적 이익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등이 주도한 당시 교체 시도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바꾸려 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교체 반대가 더 많아 무산됐고, 이후 김 후보는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중대한 위법이 없다”며 지도부 판단을 존중했다.

여 위원장은 “주진우 의원 등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거쳐 추진된 과정이었고,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당시 지도부로서는 1% 가능성이라도 높이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절차가 거칠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위기 국면에서 불가피했다’는 결론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노태우 장남 재헌, 李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

북방정책 상징 의미 반영…5·18 단체 “철회하라” 반발

이재명 정부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 자리가 올해 1월 정재호 전 대사 이임 이후 7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만큼 후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노 이사장이 중국대사로 낙점돼 실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내정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1992년 한중수교를 성사시킨 북방정책의 상징적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길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이사장은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교류 경험도 갖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노재헌 내정 보도와 관련해 “사절은 국가 간 협력 관계 발전의 중요한 교량”이라면서 한국의 공식 지명을 기다린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주러대사로는 러시아 전문가 이석배 전 주러대사를 내정했다. 그는 2019~2022년 주러대사를 지낸 정통 외교관으로, 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현지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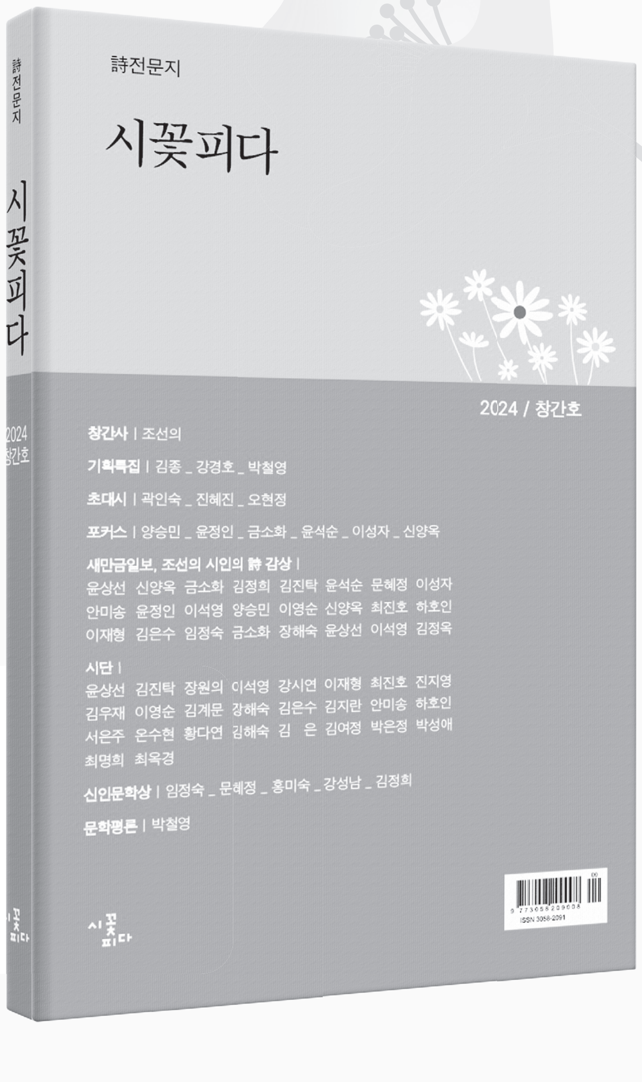
한편 이번 인선과 관련해 오월단체들은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